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2018.12.18.



농림축산식품부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III 2019년 중점 추진과제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III 2019년 중점 추진과제

농촌에 청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 '17년 3분기 이후 농림어업 고용 증가
 - 전년동기 대비 **2·30대 1만3천명**, 60대 이상 5만7천명 ↑
- 청년농 정착 및 창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 1,600명 선발, 경쟁률 3.2:1, 신규유입 42.5%

농림어업 고용동향('18.1~11)



전년 동기 대비
+5만 9천명 ↗

농촌경제를 살리고 수급 안정을 이뤘습니다

- 시장격리,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산지 쌀 값 안정
 - 정부양곡 구매(5만톤)를 실시하여 서민부담 완화
- 폭염에 대응, 무·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긴급 수급조절
- 농가에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산지 쌀값 추이



배추 비축물량 방출 효과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 모든 산란계 농장(1,500여 농가) 안전성 전수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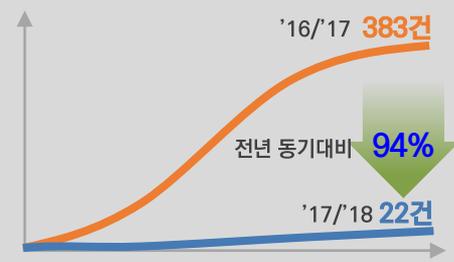
계란 안전성 부적합 농가 감소



가축질병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1-2일 빠른 이동중지명령, 3km 살처분 원칙 적용,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실시
-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확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감소



식량안보 협력으로 국격을 높였습니다

- 식량원조협약(5만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1.2만톤)으로 아프리카 난민, 아세안 이재민 지원

WFP 식량원조 전달식('18.7.21, 케냐)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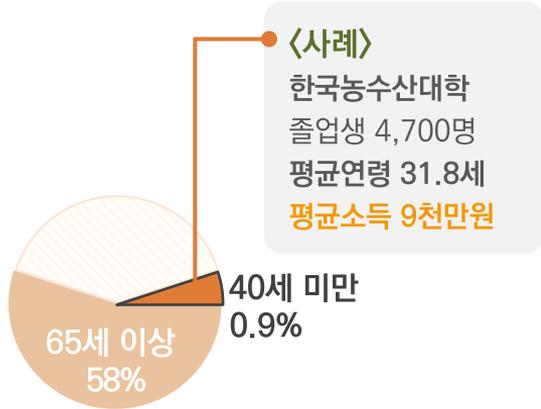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III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정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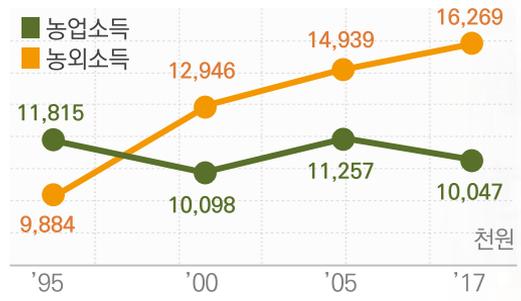
고령화 심화,
청년농이 희망으로 부각

[농가 경영주 연령비중('17)]



다양한 특화산업 발전으로
농촌 활력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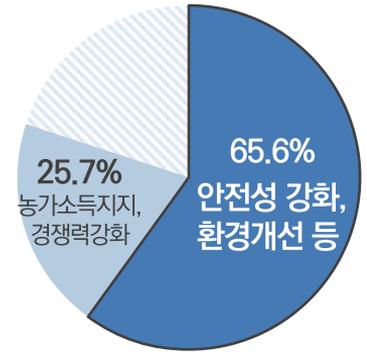
[농가 소득 구조 변화]



가공·서비스 등 농촌융복합 산업 발전
 * 인증사업자: ('15) 802명 → ('18) 1,454
 * 평균 매출: ('15) 13.3억원 → ('18) 17.2

국민들은 안전·환경 등
다양한 가치 요구

[도시민의 농업분야 세금부담 의향]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정개혁 필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경제적 가치 중심	공익적 가치로 확장
농업인	농산물 공급자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
정책	농업인프라 구축, 쌀 중심 구조	사람중심 농업(청년농·혁신농) 육성

6대 중점과제 추진으로 국민체감성과 창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

- 1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2 스마트 농업 확산

농촌공동체 활력 유지

- 3 공익형 직불제 개편
- 4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생산체계 구축

- 5 로컬푸드 체계 확산
- 6 농축산업안전·환경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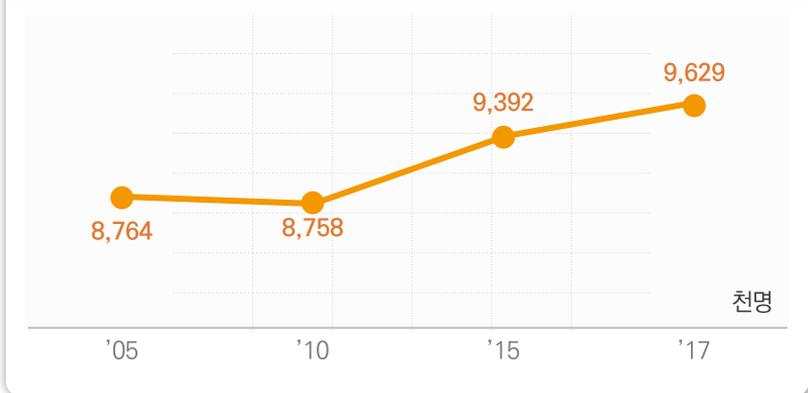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III 2019년 중점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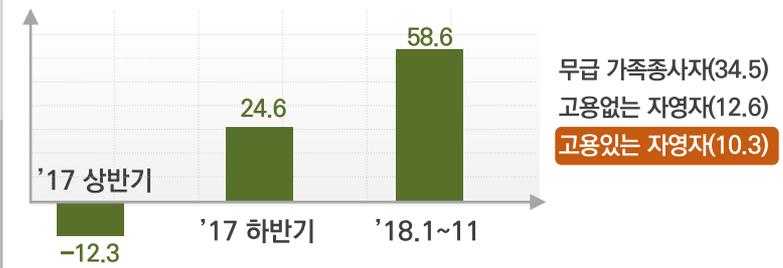
농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증가세 전환



농림어업 고용 증가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추이(전년동기비, 천명)



베이비붐 세대 은퇴, 청년의 도전

- 장년층 → 소규모 농업 활동
- 청년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

*유럽·일본도 은퇴한 전후세대 농촌 이주 증가 경험

법인화·규모화, 농촌경제 다각화

- 농업법인 상용·임시근로자 고용 증가
- 가공·유통·복지·서비스업으로 사업 확장
→ 전후방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강화

- 청년 영농정착 지원 신설
- 해외인턴 파견
- 귀농귀촌 교육·창업·정착 지원

새로운 직업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목표 | '19) 제도화 → '22) 2,800명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병원에도 전문 간호인력”

동물병원에서 간호,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자격신설

국가 자격제 신설('19)
자격취득 의무화('21)



2,000명

'22년

양곡관리사

“양곡관리의 전문화·과학화”

정부 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 도정공장 컨설팅 등

민간 자격제 신설('19)
자격소지자 권역별 채용('20)



300명

산림레포츠 지도사

“국민휴양은 산림에서”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지도, 안전관리 (산악 자전거, 산악 승마 등)

국가 자격제 신설('19)
공공 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20)



500명

'22년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창출하겠습니다

👤 | 일자리 목표 | '19) 390명 → '22) 2,200명

도시농업 관리업 “미세먼지는 그린인테리어로”

- 그린 인테리어, 도시농업 활성화
 - 학교텃밭 교육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붐업 지원
 - 도시농업 관리자(텃밭, 그린오피스 등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 고용 유도
- * 일자리 목표: ('19) 100명 → ('22) 550명

[그린 오피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가축질병 청정 국가의 첨병”

- 전문업체 통한 소독·방제 의무화 확대
 - 살충제 검사 불합격 농가('19~), 일정규모 이상 농가('21~)
- * 일자리 목표: ('19) 20명 → ('22) 640명

생활승마 서비스업 “말과 인간이 교감하는 힐링 서비스”

- 국가자격(재활승마 지도사) 활용도 제고
 - 장애인 재활 → 우울·스트레스 등 심리치료로 확대
 - 공공·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자격증소지자 우선 채용
- * 일자리 목표: ('19) 260명 → ('22) 1,050명

공동체 기반 일자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아이콘 | 일자리 목표 [19] 1,445명 → '22) 9,900명

사회적농업 활동 확산

- 농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조직 확대('19년 18개소)

[흥성 행복농장]

- 중증 정신질환자·장애인 허브·쌈 채소 생산 재할·직업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급 학생 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교육생 일부는 자립하여 농장과 지역에 고용

-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회계 등 전문서비스 지원('19년 100개소)
- 귀촌인의 경력을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지역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지역공동체 중심의 산림치유마을 모델 확산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확대

- 농촌 유희시설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19년 20개소)
- 생산·가공·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19년 1,600개)
- 신활력지구('19년 20개소) 확대
 - 일자리 기반과 정주여건 종합 개선
- 외식산업 활기 회복을 위한 권역별 푸드페스타 개최(5월)
- '산림일자리발전소' 연계 산림형 경영체(175개) 발굴·육성

[농촌 유희시설 리모델링 사례]



(제주 매월읍 문화체험 공간)



(세종시 조치원읍 카페)

청년이 농업·농촌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 일자리 목표 | '19) 2,560명 → '22) 11,000명

교육



-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 강화, 장기 체류형 실습 농장 교육 확대(100명)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설(학기당 450만원, 500명) → 졸업 후 영농 분야 취·창업

취·창업



- 농업법인 인턴 채용 확대(200명) → 정규직 전환 지원(120명)
- 창업현장보육 확대(250개소), 클라우드 펀딩 등 벤처창업 지원
- 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로 확보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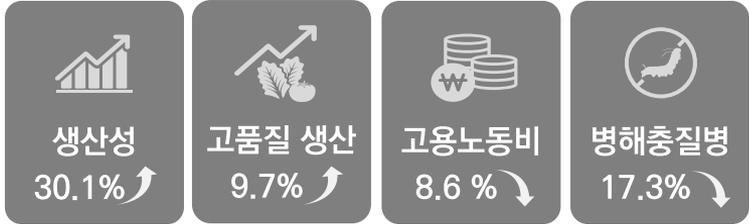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확대(신규 1,600명 포함 총 3,200명)
 -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4개소 120세대, 귀농인의 집(345개소))



스마트 농업,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

ICT·재배기술이 결합,
유망산업으로 도약 가능

- 데이터 기반 환경 제어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4.5년)를
줄이는 것이 관건

-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동개폐 등 단순 기술 수준
- 전문인력, 빅데이터 등 기초 인프라 확충 필요



추진방향

- 생산-인력-기술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시설원에 첨단화
- 농식품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스마트화 확산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인력육성과 창업 연계

- 스마트팜 교육 신설(20개월 장기)
→ 정예 청년인력 500명 양성(~'22)
- 임대형 스마트팜(~'21, 24ha)을
기반 없는 청년에게 임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 기업-연구기관 공동연구 추진
 -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 핵심 기자재 국산화
-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21)
 - 데이터 수집 표준·기자재 국가표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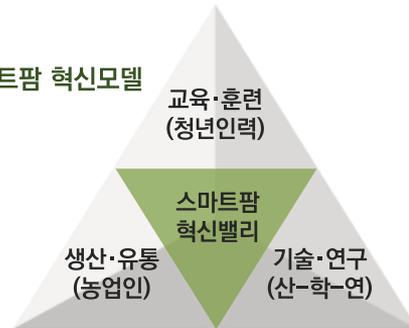
고품질 생산물 수출 확대

- 심층 현장조사로 수출 유망품목 발굴
 - 마케팅, 품질·안전성 관리 집중지원
- 수출시장 아세안 등으로 다변화
 - * 과잉 생산 등에 따른 수급불안 예방

추진 일정

- 1차 선정지 상주, 김제 착공('19년 상반기)
 - ('19) 기반조성, ('20) 보육센터·임대농장·실증단지 조성
- 2차 대상지 추가 선정('19년 상반기,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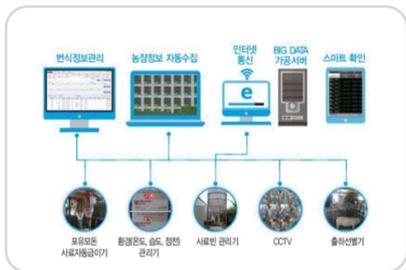
스마트팜 혁신모델



혁신, 농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축산·밭농업

-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19년 3개소)
 - 첨단기술 활용 공동 방역·분뇨처리
- 스마트 축사 확대('19년 800개소)



[스마트축사 개념도]



[스마트 축산단지 개념도]

- 노지 스마트 영농 모델 확산('19년 10개 모델)
 - 물·비료 자동 공급,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유통·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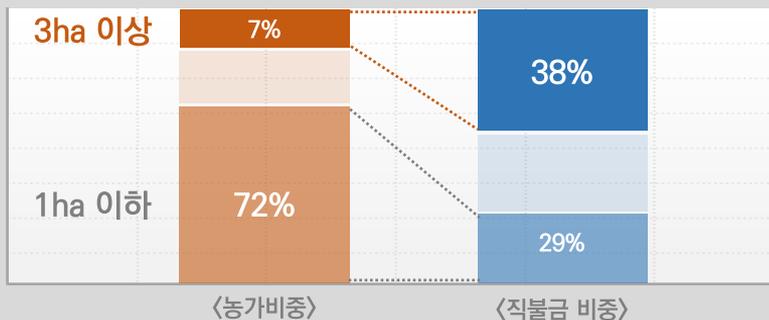
- 빅데이터·드론 활용 → 채소 수급예측 고도화
- 블록체인 활용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19년~)
 - 이력추적 기간단축(5일 → 10분), 보안성 강화
- 농산물 생산부터 수출까지 쏠과정 데이터화하여 이력 관리
 - 농약사용 현황, 수출물량 이동경로 등
- 작물 재배 정보를 전자지도에 올려놓은 스마트 팜맵 구축
 - 농지를 중심으로 영농 관련 데이터 통합·활용 시스템 개발

직불제 개편,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쌀 직불제 성과와 한계

- (성과) 목표가격의 95% 이상으로 소득보전
→ 농가 경영안정 기여
- (한계) 쌀 생산과잉 심화,
쌀 이외 작물 농가와 중소농 소득안정 미흡

농가 규모별 직불금 현황



공익 기능 창출 미흡

- 국민들은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공동체유지, 경관 등 다양한 가치 요구
- 현행 직불의 이행의무는 기초적이고 낮은 수준이나, EU 등 선진국은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이행의무 요구

한국	EU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표본 확인	수질오염 관리 동물서식지 보호 농약의 관리기록 증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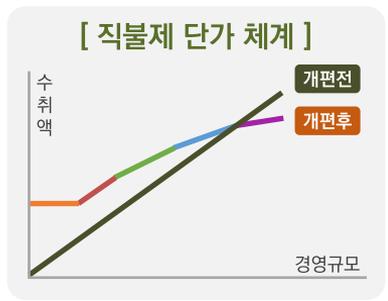
직불제 개편, 농정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기본 방향

- 땅 중심 → 사람 중심 지급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

직불제를 통한 양극화 완화

- 소규모 농가는 일정금액(기본직불금) 지급, 경영규모 작을수록 지급액 우대
- 작물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급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 생태·환경 보전의무 부여 → 국민이 기대하는 공익증진
 - * (농 가) 벵짚 농지 환원, 생태 교란식물 제거, 생태수로 및 둠벙 조성
 - * (공동체)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시행 방안

- 직불제 개편 협의회 구성(농업인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세부시행방안 마련, 농업소득보전법 등 개정 추진('19.상)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방안 제도화

중소농 소득은 직불금으로, 대농은 가격안정으로 뒷받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추진

- 농촌지역 '22년까지 3.3GW 공급 목표
- 그간 태양광 사업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연해간척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추진

주민 참여 여건 확보가 과제

- 환경·경관 훼손 지역주민 우려
- 농업인의 자금·정보 부족, 수익공유시스템 부재
- 송배전 설비 등 인프라 부족

추진방향

비우량 농지 위주 활용,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주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지침 보완
- 컨설팅,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 진흥구역 밖 농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8→20년, '19.하)

환경·안전 우선으로 수상태양광 추진

- 농어촌 공사 보유 저수지 활용
-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 우선 고려
- 후보지(899개)별 추진여건 분석 및 사업계획 구체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확산

- 농어촌공사, 농협 중심 시범사업 추진
- 수익금 용도 확대, 출자승인 등 제도개선

제도 정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보전산지 내 태양광 설치 제한 추진(산지관리법 개정)

로컬푸드,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

- (생 산 자) 중소농에 안정적 판로
- (소 비 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지역사회) 지역일자리 창출



- 적정가격으로 안정적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는 공공급식 분야를 마중물로 로컬푸드 확산

전북 완주 로컬푸드

- 중·소 가족농 대상 기획생산체계 구축
- 가공센터(2개소), 농가레스토랑(3개소), 직매장(12개소) 운영
- 급식센터를 통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 * 일자리 창출 : 659명
 - * 참여농가(2,526호) 소득 : 호당 월 평균 170만원 소득

전남 나주 공공급식

-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
- 중소농 조직화 +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망 구축



* 월 공급액 : ('18.8) 454 만원 → ('18.11) 2,829만원

지역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겠습니다

공공기관·군급식 선도모델 확산

- 나주 공공기관, 화천·포천 군급식 로컬푸드 비중 확대 ('19년 40% → '20년 50%)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반영, 중간유통인 지정제 폐지
 - 공공기관형 모델은 10개 혁신도시, 군급식형 모델을 15개 접경 시·군으로 확대('20)



지자체 지원 체계 정비

-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 * ('19) 7개 사업 → ('20) 12개 사업
- 공공급식 지원 지자체 조례 제정 유도
 - 선도모델 운영매뉴얼 배포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민간부문 확산 지원

- 지자체-생산자-수요처 등 민관 협의체 구성
-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 로컬푸드 모델 체계화
 - 우수사례 경진대회('19.3)
 - 정부·지자체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로컬푸드 유통 비중 : ('18) 4.2% → ('19) 6% → ('20) 10% → ('22) 15%

안심할 수 있는 생산환경, 농업의 기본입니다

농약 오남용, 가축 질병·악취·안전 문제



안전에 대한 농업인의 가치 인식 전환

- PLS(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 사전 준비
 - 사용가능 농약 대폭 확대, 홍보강화(경로당 순회교육 등)
- 친환경 농업 활성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인증제 관리 강화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추진

- 사육환경표시제 도입('18.8)
-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18.9 신규농장부터 적용, 0.05㎡/마리 → 0.075)



생산단계에서 안전·질병·악취를 철저히 관리하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축산물 안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PLS 조기 정착 유도

- 고령농·영세농 맞춤형 컨설팅 등 계도중심 관리 강화
 - 1:1 대면 농약안전사용 지도, 농약사용 매뉴얼 배포 등
- 희망농가 대상 사전 안전성 조사 실시
- 농약판매상 기록유지 의무 부여,
 - 농약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현행 9개 → 모든 농약)

[경로당 순회교육]



[농약판매상 교육]



부적합 농산물 유통 신속 차단

- 폐광산 등 중금속 우려지역 식용작물 재배 제한
- 부적합 다빈도 품목 집중조사, 무작위 안전성 조사 확대
-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7일→ 3일)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 HACCP 인증 표시대상 확대
 - (’19년, 도축·가공시설 → 농장까지)
-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업(GP)
 - 유통 의무화, 가금산물
 - 이력제 도입(’19.12)

[계란 선별포장업]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을 차단하겠습니다

사육기준 강화

- 오리농가 시설기준 신설 → 질병·폭염 피해 예방
- 종계업과 부화업 동시 경영시 사육시설 분리 의무화
→ 상호 질병전파 차단
- 액비 부숙도 기준 확대 시행(환경부) → 악취 확산 방지

꼼꼼한 점검과 농가 지원 강화

- 농가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 농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준수사항 통합 공고
- 축산시설환경개선 자금 집중 지원
- 분노와 토양문제 해결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철저한 사전 관리와 신속·과감한 방역

AI(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도래지 예찰 확대, 도축장 연중 검사로 발생 조기확인
- 발생시 3km 예방적 살처분, 특별방역팀 파견

구제역

- 국내 발생유형(O, A형)은 사전 백신접종으로 예방
- 유입 가능성이 있는 유형(Asia1형) 백신 비축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역 강화(검역탐지견 확대)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281개) 관리 철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